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리 주체 정했다

과적단속, 이순신 대교 등 여수·광양시 구역별 담당

과속단속, 전남경찰청과 여수·광양 경찰 합동으로

자치단체간 이견을 보여 온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관리 주체가 결정됐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 등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주요 시설물을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23일 '유지관리TF팀'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유관기관 간 과적·과속 단속 및 가로등 관

리 등 세부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로 청소, 가로등 점멸은 여수와 광양시가 행정구역별로 담당하기로 했다.

과적 단속은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와 양 시가 협조해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속 단속은 전남

지방경찰청, 여수·광양경찰서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축제 행사 등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협의해 경관조명 등을 연출하기로 협의했다.

조기 5년간 매년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 등을 재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TF팀 구성은 지난 달 개최한 도 건설방재국장, 여수·광양시

부시장 합동 유지관리방안 협의 석상을 결정된 사항이다. 전남도와 도로관리사업소, 여수시, 광양시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돼 유지관리사무실이 준공되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매월 1차례씩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처리를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시와 합동으로 가로등 점멸 상태,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 적정시공 여부, 교량 주탑 히이스트 및 난간 안전상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모두

마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지난 달 30일 준공처리한 바 있다.

운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과적·과속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나서 교량 수명이 100년 이상 되도록 내구성을 확보해 후손들에게 큰 자산으로 물려 줄 계획"이라며 "1조703억원을 들어 건설된 세계 최고의 이순신대교 주탑과 야간 경관조명 등 교량 시설물을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필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연매출 100억원대 '쑥쑥'

개장 9년만에 급성장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호남권 농산물 수출 전진기지 역할

뿐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처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개장한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운영 초기 수출농산물 물량 유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수출 과 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등에 따라 농산물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연간 100억원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를 비롯한 지역농산물 1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등 수도권 학교급식 자재로 매출, 애호박, 양상추, 수박 등의 지역대표 농산물을 납품해 32억원(102t)의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경영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무상급식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광양시는 내년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HACCP인증을 목표로 위생 및 안전시설, 상품화 시설 등을 구축하고 파프리카, 학교급식자재 등의 연간 처리 물량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6000t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 점암면 모내기 한창

고흥군 점암면의 한 농민이 22일 오후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고흥군은 22일까지 전체 1만3900ha의 논 가운데 5788ha에서 모내기를 끝

내 41.6%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파와 조사료는 90% 정도 수확이 완료됐고 보리와 마늘은 이제 막 수확작업에 들어갔다.

/고흥군 제공

전북

35사단 이전 논란 7년만에 '종지부'

전북도, 공유지 수용결정...임실군 주민 법정 다툼도 일단락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35사단 이전부지 공사가 거의 끝나 오는 8월께 준공을 앞둔 만큼 사단 내 부지에 포함된 일부 군유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35사단과 전주시는 2006년 임실군 임실읍 토지수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수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시·군 등지 자체를 상대로 토지수용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전주시의 수용안 제출과 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개월 안으로 결론이

유지 매각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다.

도가 이날 발표한 수용예정 부지는 임실군 소유의 군유지 110만9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이 공사의 사업자 측은 매입금액으로 29억9천여만 원을 제시했다.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등 7.35km에 들어설 35사단 전체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땅으로, 애초 군 막사와 도로가 들어설 부지다.

임실지역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등 법정다툼도 대부분 일단락돼 이번 토지수용을 통해 35사단 이전사업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35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법정 다툼도 일단락된다.

전북도는 이전부지에 대한 법정 다툼도 일단락된다.